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진·김중로 의원, 김동철 원내대표, 유영일 의원. /연합뉴스

# 심상창은 호남...한발짝 물러선 '安'

바른정당 통합론에 민심 부글부글...동교동계 책임론 제기  
국민의당 지도부 "통합 보다 연대"...오늘 의총서 의견수렴

국민의당이 25일 의원총회를 개최,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론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파와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강파가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통합 행보가 강한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아직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는 한편 통합보다는 연대를 강조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론과 관련, "바른정당과 정책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에서 선거연대까지도 함께 시도해보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당 중진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갖고 지역위원장들의 사퇴문제와 통합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금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더 나아가서는 선거연대까지도 추진해볼 수 있다. 통합은 그 이후 모든 여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처럼 당내 통합 논의가 제동이 걸리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지역적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의 반발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유승민 바

른정당 의원이 양당의 통합 전제조건으로 '햇볕정책과 호남 지역주의 포기'를 언급하면서 통합론을 주도하고 있는 안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평가다. 당내 일각에서는 공론화 작업 없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 논의를 추진했던 안철수 대표에 대한 책임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진영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궁극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 사이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안 대표를 출당시킬 수도 있다는 언급마저 나오고 있다.

또 호남 중진 일부가 선도 탈당을 통해 호남을 대변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대적 적폐 청산에 힘을 모으고 민주당과의 경쟁을 통해 호남의 자존심과 미래를 살리라는

것이 호남 민심의 요구라는 논리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나 연정을 통해 민주개혁 진영의 발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의총에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통합 반대론자들의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의총에서 탈당이나 분당 등 강경 발언들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정책 연대에 나서는 선에서 통합론이 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의총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관련, 당론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당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집단 지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결집을 이뤄내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行 바른정당 탈당파 몇명? ...민주 '축각'

15명 가면 원내 1당 내줘 의회권력 교체...원내 운영 어려움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갈 의원 수가 얼마나 될까.

통합 대상인 바른정당과 한국당으로서 는 당연히 그 수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탈당 의원 수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당 규모가 원내 의석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간의 중도통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바른정당의 탈당 규모가 커져 자칫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한국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121명)과 한국당(107명)의 의석차는 14석이다. 따라서 만약 바른정당에서 15명이 한국당으로 넘어가면 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내년 이후반기 국회의장을 요구하는 등 민주당으로서 원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상황에서 국회의장마저 한국당 몫이 되면 사실상 의회권력이 교체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바른정당(20명) 내부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탈당파가 15명까지 되지 않는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이 서정원·최경환 의원에 탈당을 권유한 데다 일부 의원이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약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일단 바른정당의 탈당 규모를 최대 10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대체로 바른정당 탈당 인원을 절반으로 보는 분위기"라면서 "일단 적게는 7~8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지금보다 규모가 커

지면 원내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범(汎)한국당의 의석규모가 120석을 넘으면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안건 지정도 힘들어진다는 점에서도.

바른정당의 탈당 규모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간의 통합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탈당 규모가 클 경우 이른바 중도통합론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탈당 규모가 작을 경우 중도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이전보다 더 부각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간의 통합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 천정배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도권 쏠림...양극화 불러"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4일 "현행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에 따른 2015~2016년 지원금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이 오히려 심화돼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질 평가 지원금 일부를 할당해서라도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현재의 불평등 해소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2015년 61%에서 20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0%로 지역별, 종별 불평등이 훨씬 심화됐다"며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20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2016년 2.4배, 종합병원은 2015년 3.6배에서 2016년 4.3배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금 보전 성격이다. 지원금 규모는 1년에 5000억원 수준이며, 의료진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전국 의료기관 260여곳에 지급된다.

### 정인화 "선착장·방파제 사고로 3년간 361명 사망"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24일 "갯벌·갯바위·방파제·선착장·무인도서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최근 3년간 무려 36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안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해경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의 갯바위, 갯벌, 항포구, 방파제, 연해 등에서는 총 234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6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갯바위 사고 345건, 사망 35명 ▲갯벌 143건, 20명 ▲방파제



187건, 24명 ▲연해 328건 79명 ▲항포구 387건, 73명 ▲해안가 802건, 76명 ▲기타 157건 54명이다.

정인화 의원은 "해경 소관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국감 인물

### 도시재생 성공안 제시·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제동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초선의 패기와 열정, 예리한 시선 등으로 국정감사 전반기에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이 세운 국감 방향은 ▲민주당 부 10년 이후 보수정부 9년 동안 쌓인 적폐와 잘못된 정책 바로 세우기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와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점검 및 대안 제시 ▲서민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 ▲국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점검 ▲불공정, 부조리 타파 및 제도개선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제도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등이었다.

최 의원은 우선,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성공을 위한 4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고보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 장관으로부터 "7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 장관으로부터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시작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다음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중 절반이 주거비와 물가지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최고치인 5%로 임대료를 인상해 왔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191개 단지 임대료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한 결과를 발표해 여러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